

동해안 산불 재난

건설 장비·인력 피해현장 투입 대기

피해 中企에 일대일 맞춤 복구 서비스

경제단체 지원 총력

동해안 산불 피해 현장과 이재민을 돕기 위한 도내 건설업계와 공공기관 등의 지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도회(회장:오인철)는 11일 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산불피해 성금을 전달한다. 이번 모금운동에는 도회와 분회를 비롯해 서울·인천·경기·경남·경북 등 전국 5개 시·도회 등이 동참해 10일 현재 1억6,000만원의 성금이 모

대한건설협회 도회 성금 전달

공공기관들도 동참 잇따라

였고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도회(회장:박용석)는 오는 16일 도회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1억원 상당의 성금 조성에 나섰다. 특히 이들 협회는 산불 피해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회원사의 건설장비와 인력 등을 산불 피해 현장에 투입, 복구작업에 힘을 보탬 방침이다.

도건축사회(회장:김창기)는 지난 9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산불 피해지역 주민의 주택 건축 시 설계 및 감리비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또 각 시·도협회와 공동으로 5,700만원 상당의 성금을 조성·전달하기로 했다.

공공기관들도 산불피해 복구 지원 행렬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강원지역본부(본부장:유수현)는 10일 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찾아 1,000만원 상당의 산불피해돕기 성금을 기탁했고

한국감정원은 9일 산불피해 복구성금 5,000만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이밖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산불 피해지역에 대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기한을 완화하는 '전세보증 특례상품' 운영에 들어가는 등 주거안정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피해지역 복구활동지원금 1억원과 피해주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차료 3억원 등 총 4억원 상당의 기부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종현기자 jjong@kwnews.co.kr

중기부 경영안정화 지원

속보=중소벤처기업부가 10일 도내 산불 피해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1대1 맞춤 전담해결사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9일 박영선 장관이 피해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피해기업 개별 모니터링을 지시(분보 10일자 7면 보도)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허영희 강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반장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강원영동지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강릉센

터, 기술보증기금 강릉지점, 신용보증기금 강릉지점, 강원신용보증재단으로 구성된 합동대책반을 가동했다. 중기부가 지난 7일까지 파악한 피해업체는 44곳(중소기업 13곳, 소상공인 31명)으로 기업별로 합동대책반 직원 1명씩 배정돼 복구 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복구 비용 마련에 필요한 융자, 대출 등을 논의하는 창구로 움직인다. 중기부 관계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등 지원을 통해 조속히 경영안정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

◇오인철대한건설협회 도회장은 11일 오후 3시 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도내 산불피해 이재민 돕기 성금을 전달.



전국 건설업계·건축단체 이재민 성금

모금액 3억원 돌파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종합·전문건설, 건축단체가 동해안 산불 이재민을 돕기 위해 3억원이 넘는 성금을 마련했다. 대한건설협회와 협회 강원도회는 10일 오후 6시 기준 동해안 산불피해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한 성금 1억6000만원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인 성금은 협회가 3000만원, 협회 강원도회와 서울시회가 각각 2000만원, 경기도회와 경남도회도 각각 1000만원, 경북도회와 인천시회도

각각 500만원, 건설공제조합과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이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1000만원을 모아 마련됐다.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협회 강원도회도 이날 오후 6시 기준 총 1억원의 성금을 모금했다. 대한건축사협회와 강원도건축사회, 도내 시·군지역건축사회도 모두 5700만원의 성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신관호

도-건설사 복구금액 산출액 2배 차이

도, 노인복지시설·도로 30억원 책정
건설업체, 60억원 수준 필요 추정
피해조사·추가비용 반영 놓고 차이

도가 산출한 동해안 산불피해 도로시설물과 노인복지시설 등 30억원에 이르는 시설물 피해 및 복구금액이 현실과 동떨어져 향후 복구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도에 따르면 동해안 산불피해를 입은 노인복지시설과 도로관련 시설물 피해·복구금액은 지난 9일 기준 약 30억4000만원 규모다.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고성달리다굴과 속초천사노인요양원이 전소됐고, 고성 까리따스마태오요양원과 동해약천은천실버타운은 부분소실됐다.

도는 이들 시설의 피해·복구금액을 29억2100만원으로 산출했다. 또 고성군도 12호선 등 6개 노선과 속초영랑교 등에도 1억1900만원의 피해·복구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건설업체들이 분석한 피해·복구금액은 60억원 수준으로 2배 정도 차이가 났다. 도가 산출한 피해·복구금액에 인건비 등이 포함된 부대·기타·간접비용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게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도는 이번 산불로 침하된 6개 노



10일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에서 도소방본부 광역화재조사팀이 전소된 주택 내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명준

선 도로의 피해·복구비용을 8600만원으로 산출했다. 반면 건설사들은 해당 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최소 1억7000만원으로 추산했다. 해당 도로 주변의 횡배수관(15m)과 중앙분리대(40m), 방초매트(250m), 표지판(51개)의 재료비만 8000만원이 넘는다고도 도의 산출 금액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업계의 시각이다.

노인복지시설도 마찬가지다. 도는 산불로 전소된 속초천사노인요양원 446㎡(135평)를 복구하기 위해 산출한 피해금액을 4억5100만원으로 잠정·집계했다. 불에 탄 건축물 외관과 각종 부대시설물의 피해액을 조사한 것이

다. 반면 건설업계는 실제 피해금액이 7억원이 넘을 것으로 산출했다. 화재를 입은 시설은 건축물 기둥의 경우 직접 화재를 입지 않아도 열에 의한 부식이 우려되는 만큼 도의 피해조사가 기술적 부분이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춘천의 한 건설사의 장모(50) 상무는 “화재로 피해를 입은 건축물은 전체 건물의 90% 이상을 재건축해야 하는 신축공사나 다름없다”며 “눈에 보이는 것만 확인한 부실조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피해규모가 큰 만큼, 복구에 필요한 피해액을 정확히 산출하지 못한 점이 있다”며 “산출내역을 추가 점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신관호